


<b>보도자료</b> 2012. 6. 25.	 <div> <b>대 법 원</b>  Supreme Court of Korea </div>	
	담당부서	대법원 공보관실
	담당자	윤성식 공보관 서동철 홍보심의관
	☎ 3480-1451, 1453	

# 대법원,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진행 요청

## 1. 내 용

- 대법원은 2012. 6. 25.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바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발표함(별첨 발표문 참조)

## 2. 현재의 상황

-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2. 6. 5.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 7. 10.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후보자를 임명제청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2012. 6. 15. 위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그러나 오늘(2012. 6. 25.)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법관 4인의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절차를 규정한 인사청문회법의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음

- 제3조 제3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제8조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법에 정해진 인사청문특별위원의 선임 및 증인 등 출석요구서의 송달 등의 절차와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청문회 소요 기간(1인 당 1일을 가정했을 경우 총 4일)을 고려할 때, 조속히 대법관 4인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전원합의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소부의 파행 운영으로 매달 1,500여 건에 달하는 대법원 사건의 처리 지연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

### 3. 2006년 대법관 5인 임명처리 절차

- 2006년에는 6. 19.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이흥훈, 전수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6. 26. 청문회가 시작되었고, 6. 30.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음
- 이번 대법관 임명절차는 2006년과 비교하여 시기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임명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 별첨 발표문 참조

## 대법관 임명동의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바라는 대법원의 입장

지난 15일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음에도, 아직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4인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7월 10일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인사청문회 등의 임명동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에 관한 명확한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4인의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규모의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되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으로서는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